

감귤 상품 기준 변경... 득 될까 실 될까

도, 올 상반기 중 감귤생산·유통 조례 개정 의견 수렴
2021년산 비상품감귤 생산량 22% 차지... 10만t 넘어
비상품 일부 유통 시 가격지지 악영향 우려 의견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귤 농가가 자체 폐기 또는 격리해야 하거나 주스용 등으로 가공되는 이른바 '비상품 감귤' 중 일부에 대해 앞으로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감귤 처리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격 지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상품 기준을 규정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농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열어 합리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현행 조례는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감귤을 크기와 당도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크기에 따른 상품

규격은 ▷49~54mm (2S) ▷54~59mm (S) ▷59~63mm (M) ▷63~67mm (L) ▷67~71mm (2L)이고, 당도에 따른 상품 규격은 ▷하우스 재배·월동 비가림 온주밀감 10브릭스 이상 ▷극조생 온주밀감 8브릭스 이상 ▷조생·온주밀감 9브릭스 이상이다. 당도·크기 규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 내다팔 수 없고 감귤 주스, 초콜릿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거나 폐기해야 한다. 단 조례는 크기 규격에 미달했다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라면 감귤출하연합회 협의를 거쳐 시장에 팔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도 이 예외 규정에 따라

2S 미만 중 지름이 45mm를 넘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감귤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문제는 당도·크기 규격에 미달한 비상품 감귤이 10만t에 이르면서 처리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산 비상품 감귤은 전년보다 2500여t 늘어난 10만 3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제주도개발공사와 일해, 롯데칠성 등 3개 업체가 비상품감귤을 사들여 감귤 주스로 가공하고 있지만 소비 부진으로 가공용 수매 물량을 무작정 늘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면에 계속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든다

도, 생활안전 사각지대 등 개선

제주도는 올해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더 제주처럼' 6개 정책 분야에 총 41개 사업·1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마련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은 ▷성평등한 사회 환경조성 ▷여성·가족의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 종료 해인 올해 제주도는 '여성안전'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 정책 분야에 85억4600만원을 투자한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방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안심서비스를 확대한다. 수놓음육아나눔 사업,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등 돌봄 분야에는 8억 3700만원을 투자한다. 강다혜기자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 도, 시설현대화 546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5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하는 14개 사업은 감귤 비가림하우스(30ha), 감귤원 원지정비사업(110ha), 비상발전기(160대), 자동개폐기(71ha), 관수시설(41ha), 방풍망(40ha), 무인방제시설(110ha) 등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보조 50%(FTA기금 20%·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다만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도비 20%를 추가로 지원해 보조 70%(국비 20%·도비 50%), 융자 20%, 자부담 10%를 적용한다.

도는 또 파이프, 전선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사업 단가를 3~30%까지 상향 조정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살포시 꽃망울 터뜨린 홍매화 새해 첫 절기 소한(小寒)인 5일 제주시 노형동 양석후씨의 집 정원에 홍매화 꽃이 소담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려 겨울 운치를 더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일대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태양광 벽부등·비상벨 등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CPTED)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

일 밝혔다. CPTED는 범죄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계하는 기법이다. 도는 아라동 일대에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태양광 벽부등 ▷바

닥등 ▷비상시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 비상벨 ▷폐쇄회로(CC)TV ▷안심지도 표지판 ▷지킴이 쉼터 등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일대,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 일대,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일대 등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상민기자

외국인 전용카지노 쇠락의 길...

제주도, 관리·감독 강화 담은 종합계획 수립
자금세탁 예방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카지노 업종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과 영업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5일 카지노 갱신제 도입,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조직 전문화 및 독립성 확보, 자금세탁 예방 관리·감독 체계 구축,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과 전문 모집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등을 담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영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는 제주지역 카지노 전문 모집인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문제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이다.

도내 한 외국인전용카지노 관계자는 "전문 모집인으로 등록하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족 모집인 신분 노출 시 중국공안에서 바로 잡아가 버린다. 어느 조선족이 내가 모집인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겠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잘 믿지 않아 현지 모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종 최상 등급을 받은 호텔(5성급)업 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특급호텔(4.5성급)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세계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소규모 카지노 허가 남발을 유발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9
5일 <17시 기준> 누적 4788



제주관광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JEJU TOURISM UNIVERSITY INNOVATION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대학”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형 거버넌스 체계 혁신을 통한 관광특성화 대학 실현
- 미래사회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혁신 대학
- 제주도 내 대학 취업률 1위, 제주관광대학교와 함께하십시오!



2022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정시모집

원서 접수일자 : 2021.12.31.(금) ~ 2022.01.12.(수)까지
원서 접수안내 : 입학 안내 홈페이지 참고(enter.jtu.ac.kr), 제주관광대학교 입학처 064-740-8878~9

